

---

# 2024년 금융정보분석원 업무계획

---

2024. 2.

금 융 위 원 회  
금융정보분석원

## 목 차

I. 최근 대내·외 동향 .....	1
II. 그 동안의 정책성과 및 평가 .....	2
1. 감독·검사 분야 .....	2
2. 가상자산 분야 .....	2
3. 심사분석 분야 .....	3
4. AML 제도개선 분야 .....	3
III. 2024년도 주요 정책방향 .....	4
1.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·검사 방향 재정립	4
2.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·검사 강화 .....	5
3. 신종·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 집중 ·	5
4.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강화·정비	6
[붙임] 정책과제별 추진일정 .....	7
[참고1] 범죄 관련 금융거래(계좌) 지급정지 제도 개요 .....	8
[참고2]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AML의무 부과 관련 국제동향 ·	9
[참고3] 특정금융정보법·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요지 .....	10

## I. 최근 대내·외 동향

- 최근 마약, 도박, 불법사금융 등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범정부적인 과제\*로 대두

\* "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고, 불법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"(VIP, '23.11.9)  
"민생 위협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노력에 국세청 역량 총동원"(국세청, '23.11.30)

- 범죄자들은 마약대금이나 불법대부 원리금 수취 및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 등을 악용
-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(AML) 시스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

- 한편, 익명성·초국경성을 지닌 가상자산 등 신종지급수단의 등장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하고 그 방식도 고도화, 지능화되는 경향

-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('21.3월)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AML 역량이 미흡한 사업자 진입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

- 이에 따라,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,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

- FATF는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각 국에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권고('23.10월)하는 등 범죄수익의 동결 및 환수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
- 최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가 AML 미흡 등을 이유로 43억 달러의 벌금(civil penalty, '23.11월)을 부과받는 등 각국도 적극 대응중
-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사업자 직접 검사를 통해 과태료 등 제재\*

\* 한빛코 19.9억원('23.11월), 델리오 19.0억원('23.10월) 등

⇒ FIU가 국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중심축으로서 그간의 역할을 평가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제시할 필요

## II. 그 동안의 정책성과 및 평가

### I | 감독·검사 분야

- (추진현황) FIU는 검사·감독 업무를 총괄, FIU·검사수탁기관(11개)은 금융회사등\*의 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실시 및 제재조치
  - \* 금융회사, 가상자산사업자, 전자금융업자, 카지노사업자 등
- FIU는 직접검사 6회, 검사지원 9회 실시('23년중), 검사수탁기관은 병행검사 1,095회·전문검사 223회 실시 및 793건 제재조치('23.9월기준)
- (성과)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확대
  - \* 전문기관 AML 교육실적('22→'23, 명) : (사이버)41,800→62,483(+49%), (집합)2,477→3,224(+30%)
- (보완 필요사항) 검사·제재 초점을 지연보고 등 단순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금융회사등의 실질적인 AML 역량 점진으로 전환

### 2 | 가상자산 분야

- (추진현황)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규 진입 및 변경신고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,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검사·제재 수행
  - 신규 사업자 진입신고 및 신고사업자(37개사)에 대한 변경신고를 심사\* 하고, 4개사(코인마켓 3개사, 보관업자 1개사) 현장검사 및 제재조치('23년중)
    - \* '21.10월부터 '24.1월까지 기존 사업자 변경신고 심사 완료 건은 총 117건
- (성과)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, 신고심사를 내실있게 수행\* 하고 검사·제재를 통해 AML의무 이행 유도\*\*
  - \* AML 역량이 부족한 코인마켓의 원화마켓 변경 신고신청을 불수리 → 진입 차단
  - \*\*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, 가상자산 지급불능 선언 사업자에 대해 현장검사, 제재조치 완료
- (보완 필요사항) 이용자보호법 통과('23.7월)·시행('24.7월), 대규모 갱신신고('24.下) 등 가상자산시장 환경 변화에 사전 대응·준비 필요

### 3 심사분석 분야

- (추진현황) 의심거래보고(STR)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·취약점 등에 대한 금융회사-FIU간의 환류를 강화

\*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(연6회) 및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(연2회)

- (성과) 금융회사 등의 적극적인 보고로 의심거래보고 건수 증가\* 및 법집행기관 제공을 통한 범죄수익 적발, 탈세방지 등에 기여\*\*

\* 총 STR접수(건) : '22년 822,644건 → '23년 906,462건 (+10.2%)

\*\* 약 1.78조원 상당 재산 추징, 자금세탁 범죄자 2,200명 이상 기소(검찰청, '23.11.)

- (보완 필요사항) 불법사금융, 보이스피싱 등 민생약탈 범죄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심사분석 역량 강화

### 4 AML 제도 개선 분야

- (추진현황) 국제기준 이행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특금법, 공협법 개정을 추진(4개 의원입법안 계류중)\*하고 하위규정도 함께 정비

\* ①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사업자 신고시 대주주 요건 추가, ② 신고 불수리 사유 추가, 신고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시, ③ 특금법 위반 퇴직 임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 도입(특금법 개정), ④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자 등 자산동결 대상자 범위 확대(공협법 개정)

- (성과) 금융회사 등 제재내역을 공개('23.8월)하여 제재 투명성을 높였고, 과태료 산정기준을 정비('23.12월)하여 제재 형평성 제고

- (보완 필요사항) FATF의 권고 내용 중 미이행 중인 사항, 최근 추가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법제 정비 노력을 지속 추진

- 자금세탁방지 분야(감독·검사, 가상자산, 심사분석)별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, 가상자산사업자, 전자금융업자, 카지노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보완

### Ⅲ. 금년 주요 정책방향

- ◇ 금융회사 등 감독·검사, 보고정보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, 법·제도를 선진화하여 가상자산,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적극 대응
  - 감독·검사 방향 : 금융회사 등의 “**자체**” AML역량 강화 유도
  - 가상자산사업자 : 신고심사·검사 강화로 **시장 건전화·이용자 보호**
  - 심사분석 : **가상자산·불법사금융 범죄 적발**에 역량을 집중
  - 법·제도 :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**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**

#### I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·검사 방향 재정립

-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역량 **평가**\* 결과 환류 강화
  - \* 제도이행평가 : 금융회사등의 AML제도이행·내부통제수준 평가 연 2회 실시중
  - 분야별 평가결과 제공 등을 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,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을 권고
- 금융회사 등이 **내부통제** 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직원 교육, 내규 수립, 내부 감사 등의 기준을 개선\*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\*\*
  - \* (예) 단순자료제공은 교육시간으로 불인정, 감사인 선정 기준(독립성, 전문성 등) 신설
  - \*\* (예) FIU :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, 업권별 협회 등 : 의심거래 동향 공유 등 협의체 운영
- **검사** 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운용
  - **체제**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
- 감독·검사가 쏠 업권에서 통일성있게 진행되도록 **수탁기관** 관리 강화
  - 공통 검사기준을 제시하여 업권별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검사계획, 검사·조치 실적 지속 점검·보완 요청(→ 미진시 위수탁관계 재조정 등 검토)

## 2

##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,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심사·검사 강화

-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**진입** 시도 차단
    - 신고 심사 대상을 사업자, 임원에서 '대주주'까지 확대하는 한편, 심사 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 확대\*, 사회적신용 요건 추가\*\*
    - \* 특경가법, 관련 외국법 등 추가 \*\* 채무불이행 여부 등
    - 신고 불수리 사유\* 명확화, 신고사항 추가 및 신고 관련 절차 보완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  - \* ①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, ②신청서에 거짓 내용 포함 또는 미 기재 등
  - 실제 **영업** 과정에서의 AML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·제재
    -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, 실명계정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, 사업자 갱신·변경 신고 심사,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
  -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자를 **퇴출**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운영
    - 갱신신고,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,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
- ※ 하반기 대규모 갱신신고 예정 → 2단계(상반기 중 사전 검토, 하반기 중 정식 심사)에 거쳐 면밀하게 심사
- 사업자의 임의적인 영업종료 시 이용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절차 수립·이행 유도 및 고객자금 반환현황 등 모니터링 강화

## 3

## 신종·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

- 가상자산 등 신종 불법행위,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 범죄(신종·민생 범죄) 관련 의심거래 **보고**(STR) 활성화 및 충실도 제고
  -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범죄사례 유형화 → 금융회사 제공
  - STR 보고 모범사례 공유\*, 보고결과 피드백 확대 등 금융회사등, 법집행기관과의 협력·소통 강화
  - \* 법집행기관 협의회,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,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 활용



□ 심사**분석**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·실효성 있는 정보 **통보**

- 신종·민생 범죄 전담분석 인력 투입\* 등을 통해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법집행기관과의 상시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 생산·제공

\*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(4 → 9명),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(0 → 4명) 확대

- 범죄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 구축\*으로 생산·제공 적시성 확보

\* (23년)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분석·추적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FIU분석시스템에 반영(향후) 금융거래와 가상자산거래의 차이점을 반영한 **가상자산 전용분석시스템** 구축

□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국제 범죄에도 적극 대응

#### 4

####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**강화·정비**

□ FATF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(①, ③)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(②)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법률 개정 검토·추진

- ① 자산이 동결된 테러·대량살상무기 관련자가 법인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그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·재산도 동결(참고3)

- ② 검찰 수사 前 단계에서 범죄수익의 은닉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(suspension)\* 도입 검토\*\* (참고1)

\*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영국, 독일, 핀란드 등 49개국이 기 시행중(22년 기준, 에그몽그룹 보고서)

\*\* 현재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 중(24.3월 종료 예정)

- ③ 법률·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·예방하기 위해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에게 先 자발적 협조 後 제도화 검토(참고2)

□ 위험도에 따라 AML의무를 차등화하고, 업종별 규율 체계 마련 추진

- 고객확인 기준을 상품별·상황별 위험에 따라 세분화하고, 가상자산사업자, 전자금융업자, 카지노별 특성을 반영한 특칙 강화

□ FATF, APG 등 국제기구,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TRAIN을 통한 교육 활성화, 상호평가 전문가 양성 및 평가자 제공 등 국제적인 역할 강화



주요 정책 과제	조치사항	시행시기
1.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·검사 방향 재정립		
▶ 제도이행평가 결과 환류 강화	분야별 평가결과 제공 및 자체 개선 독려 (개선부족시 현장점검)	연중
▶ 금융회사등의 AML 시스템 실효성제고를 위한 지원강화	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한 의심거래 동향 공유	2월 연중
▶ 의심거래 감시 체계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점검 강화	수탁기관 등 점검 및 지도	연중
▶ 감독·검사가 쉐업권에서 통일성있게 진행되도록 수탁기관 관리강화	수탁기관별 검사·제재 기준 공유 및 피드백	상반기
2.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,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심사·검사 강화		
▶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 시장진입 차단	특금법령 개정	상반기
▶ 사업자의 AML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·제재 강화	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점검, 실명계정 발급은행 점검, 기존 사업자 수시 검사	연중
▶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운영	신고제도 개선, 갱신신고·심사	사전검토 :24.상 정식심사 :24.하
3. 신종·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		
▶ 범죄사례 유형화 및 금융회사 제공	유관기관 간담회	연중 6회
▶ 금융회사 및 법집행기관 협력·소통 강화로 STR충실도 제고	법 집행기관 협의회 자금세탁동향 리뷰배포	3월 연중 2회
▶ 신종·민생범죄 전략분석 등 정보분석기능 강화	전담분석 인력 확대·운영	연중
▶ 외국 FIU와의 정보공유 활성화	정보공유 확대	연중
4.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·정비		
▶ 테러·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관련 자산동결 범위 확대	공협법 개정	상반기
▶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 검토	연구용역 실시 및 국내 도입방안 마련	연중
▶ 법률·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 포착·예방	先 자발적 협조 後 제도화 검토	연중
▶ TRAIN 교육 프로그램 확대	MOU 개정	상반기
▶ 상호평가 전문가 양성 및 평가자 제공	-	연중

## 참고1

## 범죄관련 금융거래(계좌) 지급정지 제도 개요

구분	단계	범죄 관련 금융거래 발생	행정기관 조사	수사기관 인지·수사·기소	법원 판결
[현재]		범죄 관련 금융거래	←→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범죄 조기차단에 한계, 범죄수익 은닉우려	(기소전) 몰수추징 보전명령 (법원)	(기소후) 몰수추징 보전명령 (판결시) 몰수추징
[개선]	금융회사	지급정지			
	행정기관		<div>[FIU]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*</div> <div>[자조단]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지급정지</div>		

\* FIU는 의심거래 분석하여 ①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정지 요청  
② 자조단에 통보

※ [유사사례]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지급정지제도

금융회사	① 금융회사 임시조치* 후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 추정 시  ②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시			
	사기이용 의심계좌 지급정지			
행정기관		③ 금감원 정보제공		
검찰·경찰			④ 수사기관 요청	

\*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포착 시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를 일시 지연(통신사기피해 환급법 §2의5)

## 1. 국제기준

- ☐ FATF\*는 금융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(AML) 의무를 변호사,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·사업자\*\*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('12년)

\* Financial Action Task Force,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'89년 설립)

\*\* 특정비금융업자(DNFBPs: Designated Non 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)

### ※ FATF 국제기준(R.22/23/28)

- ① 특정비금융업자 범위 : 변호사, 회계사, 공증인, 부동산중개인, 귀금속상 등  
 ② 자금세탁방지 의무 : ① (고객확인) 고객 및 고객의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·검증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(의심거래보고) 자금세탁 의심행위에 대해 보고의무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③ (규제·감독) 의무 이행 여부를 지정된 감독기관이 감독

## 2. 국제기준 이행현황

- ☐ FATF 정회원국 37개국 중 20개국\*이 국제기준을 既 이행하였음

\* '24.2월 기준, FATF정회원국 이행률 약 54% (이행국: 그리스, 남아프리카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말레이시아, 벨기에, 사우디아라비아, 스웨덴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태리, 터키, 프랑스)

- ☐ '20년, FATF는 한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평가(제4차 상호평가) 시 DNFBPs에 대한 AML의무 부과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\*하였음('20.4월)

\* 한국은 DNFBPs 관련 국제기준(R.22/23/28) 모두 부분 이행(PC, Partially Compliant, 미이행 등급) 평가를 받음

## 3. 국내 도입경과

- ☐ '17년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법안심의 중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('20.5월)

### ※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('17.5월 정태욱 의원 대표발의) 주요 내용

- ☐ DNFBPs가 자금세탁 위험업무\* 수행시 고객확인, 의심거래보고토록 의무 부과 (단,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 수행)  
 \* 고객의 자산관리, 법인과 신탁의 설립, 경영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 행위 등  
☐ 금융위 FIU가 DNFBPs의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·검사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☐ FIU는 이해관계자 의견 및 최근 해외 동향 등을 반영한 국제기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('22.9월~'23.8월)하는 등 현실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중

**1. 특정금융정보법(윤창현 의원, '23.9.15.) :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도입**

- ☐ (현행)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(진입규제)를 운영 중이며, 신고심사시 금융범죄전력 유무를 보고 있으나, 사업자·대표자·임원에만 적용
- ☐ (개선) ①범죄전력 심사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, ②범죄전력 심사대상 관계법을 범위를 확대\*, 사회적 신용요건\*\* 추가

\* 자금세탁관련법률, 금융관련법률 → 기존법률 + 특경가법, 공정거래법, 조세범처벌법

\*\* 예시) 범죄전력과 유사한 채무불이행 여부, 부실 금융기관 해당 여부 등

**2. 특정금융정보법(윤창현 의원, '23.12.22.) : 신고심사 운영 강화**

- ☐ (현행)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요건이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, 수리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
- ☐ (개선) ①신고 불수리 사유\*를 보다 구체화하고, ②신고수리 시 자금 세탁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시

\* ①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, ②신청서에 거짓 내용 포함 또는 미기재 등

**3. 특정금융정보법(김희곤 의원, '23.8.9.) : 퇴직자 제재근거 보완**

- ☐ (현행) 他금융법과 달리 특금법에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규정이 없음  
→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기 前 퇴직시 타 금융회사 재취업 가능
- ☐ (개선) 특금법 위반 後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  
(→ 특금법 위반시 금융회사 취업 제한되어 재직시 특금법 준수효과 제고)

**4. 테러자금금지법(김희곤 의원, '23.8.9.) : 테러관련자 자산동결 확대**

- ☐ (현행) 금융위는 테러관련자를 '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'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자의 자금·재산은 금융거래, 재산처분 등이 제한(자산동결)
- ☐ (개선)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“직·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”하는 자금·재산\*까지 동결되도록 범위 확대

\* 예시) 제한대상자가 소유·통제하는 법인의 자금·재산 등